

한국의 '과거사 청산' 운동 전진과 연대를 위한 새로운 실험

김민철

지난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에 걸쳐 한국과 일본 내부에서, 그리고 현 해탄을 사이에 두고 '기억을 둘러싼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망각할 것인가를 놓고 여러 형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때 이 기억의 중심 내용은 모두 20세기 제국주의 시대가 남긴 부정적 유산과 상처와 관련되어 있다. 이것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보자.

한국 내부	① 식민 지배로 인한 유산 - 친일파 청산 문제 ② 분단과 독재 체제로 인한 유산 - 양민학살 진상 규명, 박정희기념관 건립 문제 등
한국-일본	③ 식민 지배로 인한 유산 - 조일수교,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소송,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 등
일본 내부	④ 교과서의 역사 왜곡,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법 제정, 자위대의 해외 파병 등

이 글은 ①과 ③, 즉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 지배가 남긴 유산을 청산하기 위한 국내의 운동을 최근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우선 거칠게 정리하면 운동을 주도하는 세력 또는 담당자의 변화와 그에 따른 노선의 변화

등 새로운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더불어 한·일 간의 연대(시민 단위에서)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운동의 내용과 과제를 정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한 예비글이자 일종의 중간보고서라는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이 글은 두 가지 점에서 제한성이 있다. 첫째는 이 글이 다루고자 하는 대상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국내의 대일 운동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필자의 주관이 강하게 개입되어 있기에 운동의 내용을 완전히 대상화시켜 보지 못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특히 전망이나 평가, 그리고 문제를 보는 인식에서 그 주관은 더 심할 것이다. 어찌면 자신이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는 일을 객관화시키는 작업 자체가 한계를 전제로 할 때 비로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변명을 미리 한다. 따라서 그 한계는 일차적으로 필자의 몫으로 돌려야 하며, 각 운동의 공식적인 견해와도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필자는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인식과 움직임을 '관계성과 책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런 개념은 기존의 반일 운동과 반일 민족주의의 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층의 의미와 지향성을 띤 새로운 경향을 해석하는 데 유용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런 개념을 통해 '민족주의 논쟁'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도 아울러 비판하고자 한다.

여러 운동을 살피기에 앞서 최근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 DJ 정권의 과거사 정책의 내용과 그것이 미친 영향을 검토하는 것에서 이야기의 실마리를 찾아보자.

DJ의 빛나간 '과거와 화해하기'

DJ의 '과거사 청산' 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과거와 화해하기'였다. 화해의 내용은 내부적으로는 박정희대통령기념관 건립을 통해 독재 세력과

화해하는 것이었으며, 외부적으로는 신 한일 공동선언을 통해 일본과 화해하는 것이었다. 이 정책의 모델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화해와 진실위원회'로, 잘못된 과거의 역사와 화해하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 정책은 모두 실패작이었으며, 오히려 과거사를 청산하는 운동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즉 주관적으로는 선이었으나 객관적으로는 악이라는 결과를 빚은 것이다. 왜인가? 박정희대통령기념관 건립 지원은 5·16 군사쿠데타와 독재 세력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셈이다. 신 한일 공동선언 역시 과거의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해 형식적으로나마 부채 의식을 갖고 있던 일본 정부와 사회에 완전한 면죄부를 제공했다. 또한 피해국의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말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던 일본 내의 양심 세력들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도 함께 낳았다.

1998년에 체결된 신 한일 공동선언에 대해 좀더 살펴보자. '한·일 관계의 21세기 장전' '새로운 한일 기본조약'으로 불리는 '신 한일 공동선언'과 '행동 계획'은 1965년의 한일협정을 사실상 대체하는 향후 양국 관계 설정의 기본틀이었다. 일본에서는 이 문서들이 과거사에서 일본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데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른바 '사죄 외교의 완결판'으로 삼고 싶어했다. 과거사 청산 문제의 핵심은 일본이 과거에 한민족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지금까지 법적 책임은 물론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한국이 먼저 나서서 '과거사는 끝났다' 라고 주장한 것이다.

방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과거 반성을 외교 문서로서 명시했다고 강조하지만, 사실은 일종의 눈속임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일본말의 '오와비'는 한국말로 사과 정도의 의미이다. 『아사히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한국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일본 정부의 과거에

대한 ‘오와비’의 표현은 지금까지 ‘사과’라고 표현되어 왔으며, 이번에도 이 표현이 양국 간에 검토됐다고 한다. 10월 8일에 예정됐던 김대통령의 국회 연설 원고에 처음에는 ‘사과’라는 말이 쓰여져 있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 쪽이 한일 공동선언에서 ‘사죄’로 말을 바꿀 것을 종용했다(1998년 10월 8일 석간). 국내에서도 박지원 국회의 대변인이 마스크에 ‘오와비’를 ‘사죄’로 번역해서 보도하도록 설득했다고 한다(『산케이신문』 1998년 10월 8일). 또한 10월 7일의 자민당 총무회의에서는 한국 대통령의 방문 때마다 ‘오와비’를 하는 데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으며, 이번의 ‘오와비’도 과거의 수준을 넘지 않음을 확인했다.

일본에서는 왜 기어코 ‘사죄’라는 말을 쓰려 하지 않는가? 사죄는 죄를 인정해 잘못을 뉘우친다는 뜻을 가짐으로써 일단 죄를 인정하면 죄인이 되고, 일제의 침략, 식민지 지배의 범죄성을 인정하게 된다. 나아가 그 죄의 대가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일본은 아시아 민중들에게 막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국민을 달래기 위해 ‘오와비’를 사죄로 표현하자고 주장했던 것이며, 한국에서 공동 성명에 명기했다는 ‘사죄’는 순전히 국내용이었다.

물론 DJ는 ‘과거사 문제가 더는 한·일 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좀더 분명한 태도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10월 7일 동경에서 동포와 간담회 석상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격려사를 한 바 있다. “여러분은 과거를 똑바로 보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이 전후에 민주주의를 하고 평화를 지키고 핵 보유를 반대하고 세계 후진 국가를 도와준 그런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겠소. 그래서 과거를 청산하고 오늘의 현실을 서로 인정하는 가운데 미래의 한·일 양국의 동반자 관계를 열어 나갑시다”

이처럼 DJ는 ‘일본 정부가 결단을 보여 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 기

대는 완전한 환상이요 짝사랑에 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일본 군 위안부 문제에 관여했다는 사실만 인정하는 데도 4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다. 그런데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죄하는 데 또 얼마의 세월이 필요하겠는가!

그렇다면 주관적 의도와는 달리 왜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가? 그것은 화해를 위한 전제를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의 화해란 반성을 전제로 하며, 그 반성은 진실 규명을 동반할 때 비로소 설득력을 갖는다. DJ의 화해 정책에는 이 전제가 생략되어 있거나, 있다하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무엇이 잘못됐나를 규명할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다. 물론 모두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무지한 경우라면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빛나간 정책이 빚어낸 결과가 결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너무 쉽게 면죄부를 줬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최근 한국과 일본, 그리고 양국 사이에서 수구 반동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DJ의 빛나간 ‘과거와 화해하기’였다면 너무 심하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일까?

DJ의 화해 정책이 선이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단적인 예로 베트남에 대한 사과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 8월 23일 베트남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DJ는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해 “불행한 전쟁에 참여해 본의 아니게 베트남 국민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화해 정책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베트남 파병을 결정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한나라당 박근혜 부총재가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의 참전용사들이 이역만리 베트남 땅에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라고 공개적으로 물었다. 이어 한나

라당도 26일 성명을 통해 “김대통령의 국가관과 역사관의 실체는 무엇인가”고 따졌다. 또 주월사령부 초대 사령관과 2대 사령관을 각각 지낸 채명신·이세호 예비역대장도 이에 앞서 25일 김대통령에게 공개질의서를 내고 “베트남전 파병이 ‘용병’ 이었는지, ‘정의의 십자군’ 이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영남일보』, 2001년 8월 27일).

이들의 비판에 깔려 있는 역사 인식이 일본의 대외 침략을 정당화한 우익의 그것과 본질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과거사 청산’을 위한 새로운 실험들

1.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대한 한국의 항의 - 일본 교과서 바로잡기 운동본부 출범, 그동안 ‘교과서 공격’을 주도해왔던 대표적인 우익 단체인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이하 만드는 모임)이 신청한 중학교 공민·사회 교과서가 마침내 정부의 검정을 통과했다. 이로써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교과서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교실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됐다. 이에 만드는 모임과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고 항의하는 운동이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됐다. 마치 1982년의 역사 왜곡 항의운동을 연상케 하는 거대한 파도가 한국 사회를 휩쓴 것이다.

그러나 2001년의 운동은 1982년의 운동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우선 한국 정부가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대책반’을 만들어(4월 12일) 학계를 동원, 만드는 모임의 신청본을 비롯한 8개 교과서의 왜곡 실태를 분석한 「수정요구안」을 일본 정부에 전달한 것이다(5월 8일). 35개항의 「수정요구안」이 비록 국가 차원에서의 비판이라는 점에선 한계가 있으나 과거에 비해선 비교적 성숙한 대응이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시민단체가 교과서 왜곡 항의운동의 중심에 있었다는 점이다. 1982년의 항의가 정부 주도의 관제 데모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이번의 운동은 시민단체가 주도한 것이다. 이것은 운동의 내용이나

성격도 변화됐음을 말한다. 1982년의 운동은 대중의 반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국내의 모순을 밖으로 돌리고 일본과의 '거래'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성격의 관제운동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단순한 반일운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이에 비해 올해의 운동은 매우 복합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그 내용을 시민운동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는 '일본 교과서 바로잡기 운동본부' (이하 운동본부)의 교과서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우선 운동본부는 이번의 교과서 왜곡 사태를 일본 우익과 정부가 주도하는 '우경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파악했다. 즉 자위대의 해외 파병 히노마루와 기미가요의 국기·국가 제정→교과서의 역사 왜곡→평화헌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우경화 프로젝트'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 문제를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시킴으로써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개편해 궁극에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간 과정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런 인식 아래 운동본부는 운동의 목표를 '1) 단순한 반일운동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운동으로 발전시킨다. 2) 일본의 우익과 정부를 고립시키기 위해 일본의 시민단체와 연대를 강화해 나간다. 3) 이를 계기로 한국의 교과서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운동을 전개한다'로 설정했다.

이런 변화에는 80년대 이후 급속도로 발전해온 한국 민주화운동의 성장이 반영되어 있다. 민주화운동이 성장함에 따라 그동안 보수 세력의 전유물 정도로만 취급했던 한·일 간의 민족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나아가 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운동의 내용도 변화시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성장과 전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는 남아 있다. 첫째, 일반 대중의 경우 아직도 단순한 반일감정에서 움직이고 있다. 여론 또한

지나가는 태풍처럼 일시적인 관심만 기울일 뿐이다. 비록 운동본부가 이번 운동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대중은 반일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역사 왜곡이라는 수준을 넘어 자위대의 해와 파병과 같은 중요한 문제로까지 인식이 확대되질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를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셋째, 정부 또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그저 조용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시민단체의 비판을 의식해서 마지못해 교과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인식일 것이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운동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대중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계와 시민단체 간의 연대를 넓히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교과서 문제가 한때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만드는데 모임은 '4년 후의 복수'를 선언했다. 이것은 4년을 단위로 교과서에 대한 일본 우익의 전면적인 공격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늦춰져서는 안 된다. 특히 '한·일 역사 공동연구 기구'의 인선이나 활동에 대한 감시가 중요하다. 과거에도 공동기구가 있었지만 모여서 식사나 하는 사교모임에 지나지 않았고, 더 심각한 것은 미우라 슈몬과 같은 '교과서 공격'의 주역이 한·일 문화교류 회의의 일본 측 위원으로 구성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번의 공동기구에는 양국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와 운동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와 연대를 더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예를 들어 한·일 공동 역사 부교재 개발)들이 필요하다.

2. 강제 동원 진상규명을 위한 연대: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가 남긴 상처 가운데 하나로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를 들 수 있다. 1939년부터 1945년 사이 최소한 150만 명 이상의 조선의 젊은이들이 징용·징병·일본군 위안부 등으로 강제 동원되어 일제의 침략 전쟁에 희생당했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일본 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한국 정부 또한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다.

이런 악조건 아래서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들이 어떻게 싸워왔는가를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피해자 중심의 운동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피해자나 피해자 단체의 분산성이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주장할 만큼 힘이 크지 못한 데다, 일본의 눈치를 살피는 역대 한국 정권의 탄압으로 조직적인 결집조차 힘들었다.

둘째, 고립성이다. 양민학살이나 미군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에 비해 강제 동원 피해자들은 사회단체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짧았던 만큼 사회단체가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문제로 인식하는 잘못 때문이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는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여성·인권단체가 10여 년이 넘게 줄곧 국제 사회에 호소해왔기 때문에 비교적 연대가 잘 이뤄지고 있다. 최근 징용·징병 피해자들의 경우도 주로 소송을 중심으로 일본의 사회단체와 연계를 가지고 있으나 연대의 차원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다.

셋째, 보상으로 인해 문제의 본질이 흐려지는 점이다. 소송의 경우 아무래도 보상 문제가 중요한 관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나 피해자 단체의 의식이 1차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보상이라는 유혹에 쉽게 밀려든다. 보상을 미끼로 브로커들이 개입하거나 '아시아 여성기금' 처럼 돈으로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대신하려는 일본의 정책에 영합하는 잘못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모색이 2000년 여름부터 시작됐다. 미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소송에 대한 한국 정부나 사회의 방관, 과거사 청산 문제로 담보 상태에 빠져 있는 조일수교 협상에 대한 답답함, 피해자들의 고군분투에 침묵으로 답하고 있는 역사학계나 지식인의 나태함 등을 반성하면서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가 강제 동원 진상규명을 위한 모임을 발족했다.

‘진상조사 활동을 매개로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달성하고 나아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동의 아래 1) 고립되고 분열된 피해자 단체의 결집과 조정, 2) 학계와 연계한 진상조사 활동을 확대 3) 사회문제로 확산, 4) 조일수교의 간접적인 지원, 5) 진상규명을 위한 한미일 네트워크 강화, 6) 한일협정 개정운동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는 크지 않으나, 최근 ‘일제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국내 피해자 단체의 전국적인 연대는 일단 궤도를 탄 셈이다. 한·일 간의 연대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며 조직적이다. 그렇지만 우리에게겐 시간이 별로 없다. 피해자들은 월 평균 1%씩 사망하고 있으며, 생존자 또한 하루가 다르게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부당함을 고발하던 역사의 주체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존재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 전에 피해자의 명예회복은 물론이고 국가권력에 의해 파괴된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3. 친일파 청산운동과 한·일 관계

한국 사회에서 친일파라 하면 단지 일본과 친한 사람을 지칭하는 사전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 친일파란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과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에 의식적으로 협력한 자’란 뜻으로 부일 협력자·민족 반역

자, 심지어 매국노와 같은 뜻으로도 쓰인다. 그런데 최근 한국 사회에서 친일과 문제가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서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10년이 넘게 친일과 문제와 씨름한 민족문제연구소가 마침내 과거 청산의 한 결산으로 한국의 역사학계와 협력해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하기 위한 사업에 들어갔다.

주지하듯이 해방 후 친일파는 죄에 대해 책임을 지기는커녕 독립운동을 대신해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지배층으로 자리잡았고 분단과 독재 체제를 지탱하는 핵심 세력이 됐다. 이로 인해 식민지에서 독립한 신생국으로 하여금 그 존립 기반이 될 최소한의 가치관과 역사의식을 무너지게 만들었고, 잘못을 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는 상식조차 부정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50여 년 넘게 지나면서 일반대중에게까지 일상화됨에 따라 정의의 칼을 쥔 자의 것이며 역사는 언제나 권력자의 편이라는 자조 섞인 역사 인식을 갖게 했고, 그 결과 한국 사회는 마침내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할 능력조차 상실한 사회가 됐다.

김활란상과 미당문학상, 홍난파기념관과 박정희대통령기념관 등과 같은 몰가치적 인물 미화가 최근 빈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문화 풍토의 한 표현이다. 이들 기념상과 기념관에서 우리는 한 인간의 공적과 과오를 아우른 올바른 기억과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민족공동체에 끼친 부정적 행위마저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1948년 친일파 청산을 통해 역사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반민특위가 극우 세력의 폭력으로 파괴됐다면, 친일파들에 대한 대대적인 기념 사업은 잘못된 과거사를 정당화하려는 또 다른 역사 파괴이다.

일본 또한 마찬가지이다. 패전 이후 '과거'를 주체적으로 청산하지 못한 결과, 역사 왜곡과 은폐라는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올바른 과거의 기억을 복원하고 부끄러운 역사 청산 운동이 전개된다면 이는 곧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과 시민들에게도 큰 자극제가 되어 우익의 공

세를 막아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의 시민단체가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의 교과서 문제를 고민하게 됐듯이 한국의 친일파 청산운동이 일본의 극우 세력과 '전범'의 후손들이 발호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친일인명사전』 편찬은 한·일 과거사 청산에 대한 한국 내부의 도덕적·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에 불고 있는 보수반동의 물결을 차단하는 데도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20세기 일본 제국주의가 남긴 유산을 청산하기 위한 양국의 운동은, 비록 그것이 일국 내의 운동일지라도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동의 기억'을 말살하려는 세력들과 싸우고 폭력과 야만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노력에 국가나 민족이란 경계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관계성과 책임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 먼저 1999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벌어진 일본의 논쟁을 소개한다.

1997년 9월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가 주최한 <내셔널리즘과 ‘중군 위안부’ 문제> 심포지엄에서 다카하시 테츠야 高橋哲哉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일본 내셔널리즘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일본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에 긍정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일본인이 전후 책임을 지려고 할 때, 일본이라는 정치공동체로 귀속하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묻고 있는 것이 일본의 전후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셔널리즘이라는 규정에 복속될 필요가 없다면, 국민국가로의 융합과 동일화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이 때 ‘일본이라는 정치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은 공적·정치적 존재, 따라서 우리 자신의 정치적 행위에 의해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라

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우에노 치즈코 上野千鶴子가 ‘일본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자신의 ‘정치공동체로 귀속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이며, 결국에는 ‘내셔널리즘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비판 아래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정사(正史)’를 갈구하는 욕망은 국민 사이에 집단적인 정체성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망과 같은 것이다. 그곳에는 국민국가와 자기의 동일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나’와 ‘우리’라는 유혹과 강제가 있다. 이 속에는 ‘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나’ 또한 포함된다. 그러나 그것 역시 국민국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국가와 개인의 동일화를 우리들은 내셔널리즘이라고 부른다.

‘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젠더나 국적, 직업, 지위, 인종, 에스니시티 등 다양각색으로 존재하는 관계성의 집합이다. ‘나’는 그 어느 것도 피할 수 없지만 그 어느 하나로도 환원되지 않는다. ‘내’가 거절하는 것은 단일의 가테고리의 특권화나 본질화이다.

논쟁은 곧바로 확대됐다. 그 가운데 서경식은 다카하시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우에노의 논리를 다시 비판했다. 페미니즘에 기초한 우에노의 주장은 『패전후론(敗戰後論)』의 저자로 일본이 전쟁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먼저 전쟁에서 죽은 일본인의 영혼을 위로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토 노리히로뿐만 아니라 다카하시처럼 자율적인 ‘일본인의 책임’론까지 비판하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요지는 이렇다.

‘국민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개념을 ‘일본인의 자부심’ 회복을 호소하는

신구의 국가주의자들과 같이 국가에 대한 충성의 의무라는 의미로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우에노씨와 같은 논의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논쟁의 문맥에서 다카하시씨가 강조하고 있는 그것은 자국의 국가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응답 책임이며, 국가 범죄의 사죄와 보상을 만족스럽게 실행하지 않으려는 정부를 가진 국민(주권자)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관계성'을 갖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일본 국적 보유자인 한, 일본 국민이라는 '관계성'을 벗어던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 '관계성'에서 기인하는 책임, 일본국의 주권자인 어느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이 물어지게 되는 것이다.

주체의 복합성	관계성	대상의 복합성 예
실존적 존재 시민 성 국민 계급 가장 주의자 직위 등	←→	<p>일본군 위안부</p> <p>①가부장제 - 성차별: 한국과 일본의 가부장제 대 여성 ②민족 억압(조선인): 한국(조선)인 피해자 대 일본정부 ③인권(노예적 삶): 피해자, 시민 대 국가 폭력</p> <p>일본 교과서</p> <p>①민족·국가간 대립: 한국과 일본 정부, 피해국 대 일본 정부 ②국가 이데올로기: 일본 시민 대 일본 정부 ③인권, 평화, 우경화: 동아시아 민중, 일본 시민 대 일본 정부</p>

나는 이 논쟁을 통해서 과거사 문제를 보는 인식과 관련해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 key word, '관계성'과 '책임'을 도출하고자 한다.

관계성이란 '과거사'라는 대상을 주체가 어떤 위치에서 관계할 것인가를 말한다. 이 때 대상과 주체 사이에는 많은 복합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대상 자체가 가진 복합성과 주체의 복합성도 함께 존재한다. 이를 도식으로 정리해 보자.

이 때 주체와 대상을 어떻게 관계지를 것인가, 즉 '배치'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누구이며 어떤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가, 즉 역사 인식과 방법론의 문제가 제기된다. '지금' '여기서' 무엇을 매개로 '과거사'라는 대상을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가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떤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따라서 다른 관점을 배제하고) 사물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개입하고 있다. 사물을 판단할 때 우리는 인식적 판단(참인가 거짓인가), 도덕적 판단(선인가 악인가), 그리고 미적 판단(쾌인가 불쾌인가)이라는 적어도 세 가지의 판단을 동시에 한다. 그것들은 뒤섞여 있어서 확연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그 경우 과학자는 도덕적 혹은 미적 판단을 배제하고 사물을 본다. 그럴 때에만 인식의 '대상'이 존재한다. 미적 판단에서는 사물이 허구라든지 악이라든지 하는 면을 배제한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일은 아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배제할 것을 '명령받는' 것이다. 그리고 배제는 세 가지 판단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판단 안에서도 배제는 항상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에 익숙해지면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민족 '주의' 적 관점은 주체의 복합성(다양성)을 민족의 문제로 환원시키고 주체의 다양성을 민족 속에 종속시키도록 명령한다. 그런 점에서 우에노의 비판은 정당하다. 그러나 그 대안으로 제시한 자율적 개인이나 탈민족국가적 시각, 또는 페미니즘 관점 역시 다른 것을 배제하고 있다. 모든 개념이나 이념은 자신의 동일성(정체성)을 위해 타자를 배제하고 있다.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민족주의 또한 하나의 타자이다.

따라서 문제는 배제 그 자체가 아니라 배제하는 방식에 있다. 타자에 대한 부정이나 말살, 폐기 역시 또 다른 환원주의의 역압이다. 우에노 역시 이것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의 주장대로라면 현실에서 구체적인 탈출구(해결책)가 없다.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과 일본의 가부장제가 해결되어야만 비로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직접적인 책임 주체(일본 정부의 책임)가 소멸되고 나아가 문제 자체가 해체된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또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 그가 설명할 수 있는 해법은 없다. 이것은 두 번째 문제 즉 운동에서 흔히 나타나는 청산주의로 빠질 위험성을 다분히 갖게 된다. 한 이념의 특권화에 대한 저항이 그 이념 자체를 부정해 버리고 싶은 유혹으로 발전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긴 하나, 운동에서 나타나는 병폐는 그것이 쉽게 청산주의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관계의 복합성이란 측면에서 우에노의 주장처럼 어느 하나에만 특권을 부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역으로 다양성만을 주장하는 것은 다양하다는 것에서만 머물 뿐이다. 그것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전개될 때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항상 '배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다. 자각이 일어나는 순간 배제는 포용과 공존으로, 특권화와 본질화는 상대화와 객관화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된다. 이런 점에서 나는 '민족주의 비판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일본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몇 차례 논쟁이 있었다. 이 논쟁 가운데 한국의 내셔널리즘으로선 일본의 역사 왜곡, 일본의 내셔널리즘을 극복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또한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한국 민족 대 일본 민족, 한국 국가 대 일본 국가라는 민족국가의 틀에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한 자기 모순에 빠진다는 것이다. 그런 주장의 논리적 한 결과로 '자율적 개인들의 연대,' 다시 말해서 동아시아의 시민연대를 제창이다. 매우 당연하다. 그러나 '동아시아 시민연대론'이 '민족주의 비판론'에서 주장하듯이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는 논리로 직결된다면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빛나간 비판이다.

첫째, 관계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또한 특정 부문(시민, 개인)에 특권을 부여하는 인식에서 나온 발상이다. 이런 인식에 따르면 중국 정부나 북한

정부가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된다. 국가 폐기론 자라 하더라도 일본의 우경화가 동아시아의 긴장을 조성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각국의 내부를 경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를 견제하는 역할이 일차적으로 시민사회에 있지만, 동시에 현실의 국가 간 체제에서는 외국 또한 견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민족주의를 비판한다고 해서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역할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시민연대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중국이나 북한의 경우 연대의 파트너는 국가의 대리자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근대 국민국가를 이해하는 방식의 문제, 더 나아가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라는 문제와도 관계된다. 국가란 본질적으로는 계급 지배의 도구지만(본질론), 계급 대결로 인해 초래될 수도 있는 공동체 자체의 붕괴를 막기 위한 기능, 또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대표하기 위한 기능(기능론)도 함께 갖고 있다.

따라서 공동체를 대표하는 정부가 공동체나 그 구성원이 모욕이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것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거나 항의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여기서 한국의 시민단체와 한국 정부가 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그러나 그 연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국의 시민단체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것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국가주의와 군사대국화, 남성의 여성 차별, 역사 속의 민중 소외, 전체주의, 침략 전쟁에 대한 무책임 등이다. 그렇다면 왜 일본의 시민단체는 동아시아 각국의 시민뿐만 아니라 정부와도 연대를 하는가? 이것은 침략 전쟁에 대해 무책임으로 응답하고 있는 일본 정부라는 자신들의 '정치공동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시민단체와 정부는 협력과 대립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바르다. 대립은 시민단체가 국사 교과서와 국사 이데올로기를

정부가 독점하는 것을 비판하고 나섰을 때 전면화될 것이다. 시민(단체)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문제로 돌아왔을 때 역사 이해를 둘러싼 갈등은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것은 국면(장단기)에 따라 어떻게 '배치' 하는가 하는 문제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맺으면서

이상에서 '과거사 청산' 을 둘러싼 최근의 상황과 논의를 간단하게 살펴봤다. 그러나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이 글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거사 청산' 운동 전체를 조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 실험들을 중심으로 소개했을 뿐이다. 더군다나 상황이 낙관적이지도 않다. 교과서 운동본부가 아직까지는 대중 속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 갓 태어난 특별법제정 추진위원회는 피해자 단체 전체를 지도하지 못하고 있다. 친일파 청산 또한 수구세력의 저항에 의해 쉽게 추진되진 않을 것이다.

20세기 야만의 시대가 남겨놓은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려는 목소리와 몸짓들이 조금씩 그 힘을 키워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소수이고 일꾼 또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기에 서로가 가진 정보와 지혜를 함께 나눠 연대의 틀을 강화하고, 그 범위를 넓혀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부과된 공동의 임무일 것이다. ■

김민철 banmin@hanmail.net |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경희대 사학과 겸임교수. 논문으로 「일제하 사회주의자의 전향연구」,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제2차 가해」의 다수.